

대구광역시 달성군 노인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 
관한 조례안 등

## 검 토 보 고 서

<제177회 임시회>

2009. 4. 15

달 성 군 의 회  
전문위원 김 동 섭

# 대구광역시 달성군 노인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

## I. 개 요

1. 제출연월일 : 2009년 4월 2일

2. 제 출 자 : 달성군수(사회복지과장)

### 3. 제정 이유

- 노인분들의 건강 증진과 교양오락, 고충상담, 기타 복리증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달성군 노인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.

### 4. 주요내용은

- 노인복지관의 수행업무 및 기능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- 시설의 위탁운영 근거 마련(안 제4조)
  -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이나 단체(기간: 3년)
- 복지관 이용자 범위 등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
  - 달성군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노인
  -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일반인에 대한 사용허가
- 복지관의 이용료 및 사용료에 관한 사항(안 제6조)
  -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기타 공익상 필요한 경우 이용료 면제

- 수탁기관의 의무 및 계약 해지 등에 관한 사항(안 제7조, 제8조)
- 수탁관리자의 지도감독 및 예산 지원 규정 마련  
(안 제9조, 제10조)

## 5. 참고사항

- 관련법령 : 노인복지법 제37조 및 제39조  
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4조,  
지방자치법 제22조, 제139조, 제144조

## II. 검토의견

대구광역시 달성군 노인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,

- 옥포면에 건립중인 노인복지관이 올해 7월경 개관함에 따라 노인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, 노인복지수요가 늘어나고 다변화됨에 따라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가 선용과 복리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지며, 이를 통해 고령사회 노인복지 수요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.

## 관 계 법 령

### [노인복지법]

제37조 (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)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.

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
③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,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. <개정 1999.2.8, 2008.2.29>

제39조 (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)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.

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
③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,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. <개정 1999.2.8, 2008.2.29>

### [노인복지법 시행규칙]

제24조 (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 및 이용절차) ①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. <개정 2008.1.28>

1. 노인복지관 및 노인교실 : 60세이상의 자
2. 경로당 : 65세이상의 자
3. 노인휴양소 : 60세이상의 자 및 그와 동행하는 자. 다만, 이용 인원이 정원에 미달하는 때에는 정원의 100분의 30의 범위안에서 그 외의 자도 이용할 수 있다.

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노인복지관 및 노인교실 이용대상자의 배우자는 60세미만인 때에도 이용대상자와 함께 이용할 수 있다. <개정 2008.1.28>

③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은 시설별 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## [지방자치법]

제22조 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제139조 (사용료의 징수조례 등) ① 사용료·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 다만,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.

② ~ ③ 생략

제144조 (공공시설)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.

③ 생략

#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

## I. 개 요

1. 제출연월일 : 2009년 4월 2일
2. 제 출 자 : 달성군수(환경관리과장)
3. 개정 이유

○ 현행 조례에서 규정한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기준을 완화하여 지급대상을 확대 실시하기 위한 것임.

## 4. 주요내용은

○ 보상 제외대상 축소 (안 제4조)

구 분	현 행	개 정
피해면적	330㎡ 미만	165㎡ 미만
피해금액	20만원 미만	10만원 미만
기타제외	(신설)	「야생동·식물보호법」 제12조 규정에 의한 피해방지시설 또는 비용을 지원 받은 경우

## 5. 참고사항

○ 관련법규 : 야생동·식물보호법

## Ⅱ. 검토의견

대구광역시 달성군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,

- 2008년 1월 1일 「달성군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」가 시행되었으나 피해면적 기준 및 피해보상 산정액 미달로 소규모 피해를 입은 농업인들은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함에 따라 보상금 지급기준을 완화하여 농작물 피해에 따른 보상금을 확대 지급하고자 하는 것으로 농업인들이 보다 더 안정적인 영농활동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.

※ 2008년 피해보상금 지급현황 : 852천원 / 3건

## 관 계 법 령

### [야생동·식물보호법]

제12조 (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의 예방 및 보상)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·임업 및 어업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그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멸종위기 야생동물 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시·도 보호야생동물에 의하여 농업·임업 및 어업상의 피해를 입은 자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야생동물에 의하여 농업·임업 및 어업상의 피해를 입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피해를 보상할 수 있다.

<개정 2004.12.31, 2005.3.31, 2007.5.17>

1.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야생동·식물특별보호구역
  2.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시·도야생동·식물보호구역 및 야생동·식물 보호구역
  3. 「자연환경보전법」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생태·경관보전지역
  4. 「습지보전법」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습지보호지역
  5. 「자연공원법」에 의한 자연공원
  6.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도시공원 및 도시자연 공 원구역
  7. 그 밖에 야생동물의 보호를 위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지역
-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피해보상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